

# 당·정·청, 역대 최고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금 '합의'

희망회복자금 피해지원 내달 지급  
코로나 피해 손실보장, 기간 최소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등 논의 없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더불어 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사업과 관련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 3조5300억원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 방침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먼저 희망회복자금 피해 지원을 오는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역대 재난 지원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은 제

도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 기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 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 등으로 맞춤형 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신설 및 최고 지원 단가 상향(3000만원) 조정 ▲경영위기업종 기준 세분화(매출액 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 신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 예산 두 배 증액(기존 6000억원→1조2000억원)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존중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협의해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

액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없었다. 이와 관련한 캐시백 지급이나 국채 상환 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체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고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안은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론 나기가 오늘 어렵고 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 서울시장 만난 최재형

# “오세훈, 역전 드라마 쓴 고수”

최재형, 당내 인사 중심 접촉면 넓혀  
부동산 정책·방역 상황 등 현안 논의

국민의힘 '새내기 당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당내 인사 중심으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 지지 세력 확보',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비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오세훈 시장과 만나 약 3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입당 잘하셨다"며 "이제 당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반겼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서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전 원장은 오 시장과 만남에서 "계층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고 국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남에서 최 전 원장은 올해 4·7 재·보궐선거 경선 단일화 당시 오 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경쟁 끝에 승리한 데 대해 '역전 드라마'라고 표현하

며 "(오 시장의) 저력을 보고 놀라고 감동이다. 역시 고수"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최 전 원장이 대선 경선 후보 주자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만큼 오 시장에게 조언 얻기 위해 만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오늘 방문은 제 아버지 장례식에 조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장 당선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오 시장과 만남에서 "지도자는 자기주장을 설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때론 설득당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소폭 상승 현상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국민이 눈높이 맞춰서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지난 1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치 선언을 한 뒤 국민의힘 관계자 위주로 만나고, 같은 달 15일 입당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최 전 원장은 김미애 의원을 포함한 당원들과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불참... 정상회담 무산

靑 "정상회담 성과 삼기에 미흡"  
의제 성과 줄다리기... 끝내 결렬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로 일본에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면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에 회담 의제와 관련한 상당한 이해의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 여전히 미흡하고, 그 밖의 제반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무산

됐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별개로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타진해 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우선 해제 등 정상회담 성과를 담보로 한 물밑 협상을 벌여왔지만 일본이 끝내 외면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물밑 협상 막판에 불거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 망언에도 일본이 원론적인 유감 표명 외에 경질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한 것이 협상 결렬 선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떠한 상황, 맥락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이뤄진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사이의 회담이었다. 스가 총리 취임 후 대면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영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약속 회담을 추진했지만 스가 총리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최영훈 기자

# 文 "방역 위반시 예외 없이 책임 추궁"

"고강도 방역 조치 '짧고 굵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과 관련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주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전국 단위 거리두기 상향 조치',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 방역 조치 강화 상황을 언급한 뒤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 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속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 피해 지원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